

OECD EPC 회의 출장보고서

◇ '16.11.14~15일, 파리에서 OECD 경제정책위원회(EPC: Economic Policy Committee)가 개최된 바, 회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우리측 참석 : 민생경제정책관(수석대표), 한국은행 조사국 최인방 차장, KDI 거시경제연구부 천소라 부연구위원 등

1. Using the fiscal levers to escape the low growth trap (저성장기조 탈피를 위한 재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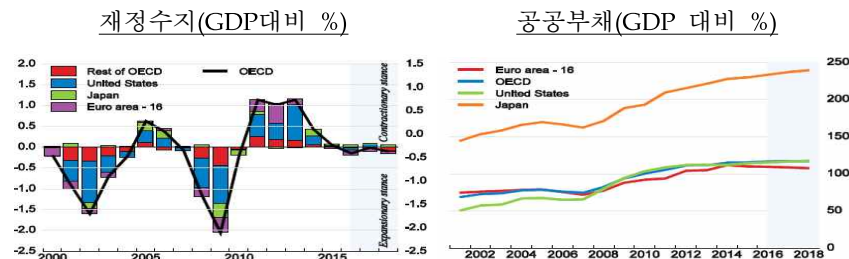
< OECD 발표내용 >

□ 논의 배경

- 금융위기 이후 투자, 교역 부진 및 생산성, 임금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
- 그간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의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
-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 장단기 성장 제고를 위해 공공지출 확대 필요, 이를 위해 각국의 재정여력을 재평가할 것을 권고
 - 특히, 재정균형에만 신경썼던 과거와 달리 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

□ 재정수지 개선 및 공공부채 증가세 둔화

- 2008년 이후 확대되었던 재정적자가 감소하며 2015년 이후 재정수지 균형 추세, 공공부채 비율 증가세도 최근 둔화(일본 제외)



□ 재정지출 여력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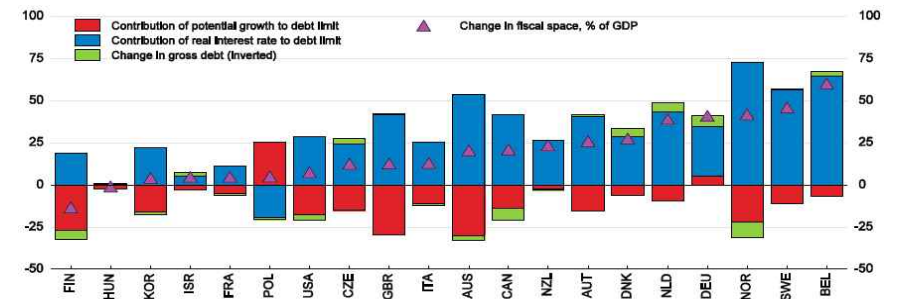
① 시장 접근법을 통한 접근

- 現채무수준과 한계 채무수준*과의 차이를 통해 재정여력 측정

* 각 국가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도출

→ 잠재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지출 여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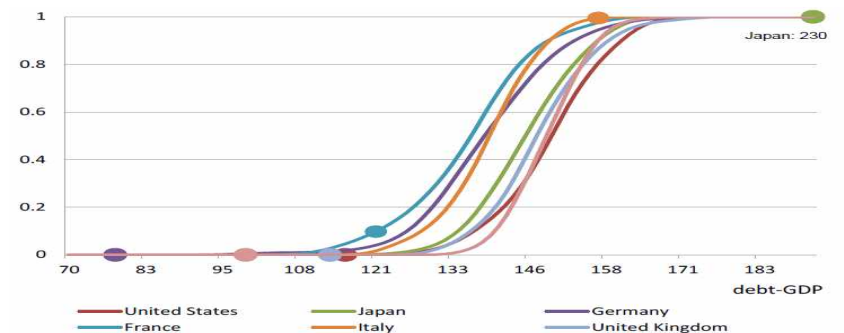
2014년 대비 2016년 재정여력 변화 및 요소별 기여도



② 장기 지속가능성을 통한 접근

- 부채비율에 따른 디폴트 확률을 통해 재정여력을 측정하며, 고령화 등 구조적 측면을 포함
-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나, 일부를 제외한 주요국의 경우 재정지출 여력을 보유

재정한계 누적분포(Fiscal limit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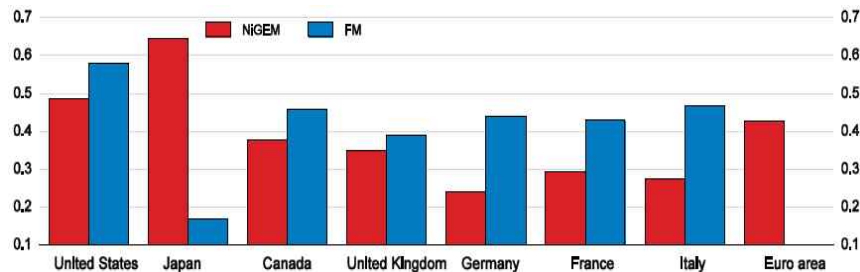
< 분석에 사용한 모형 >

- ① F&F 모형 : 장기 확률 모형, 투자잔고에 따라 투자 효율성 결정(27개국 대상)
- ② FM 모형 : 구조적(이력가설) 국제적 측면의 분석을 포함(일부 선진국 대상)
- ③ NiGEM 모형 : 국제거래 등 국제적 측면의 분석(전국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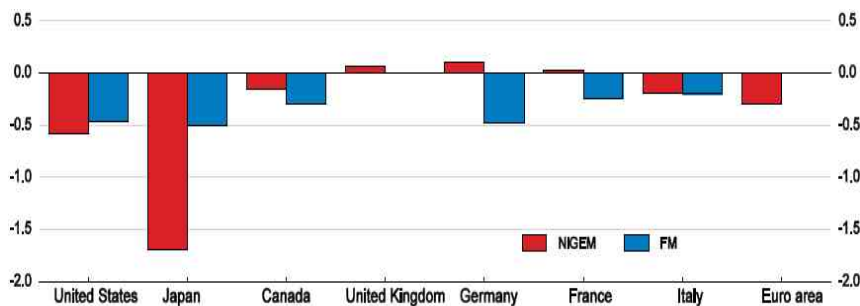
① 재정지출의 단기 효과

- GDP의 0.5%만큼 재정지출 확대시, 평균적으로 정책 시행 첫째 GDP의 0.4~0.7% 제고 효과
- 공공투자는 자본스톡·잠재성장률을 증가시켜 민간투자를 촉진하며, 네트워크 산업 집중시 투자촉진효과 더욱 증가
-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부채비율도 축소

재정지출로 인한 1년후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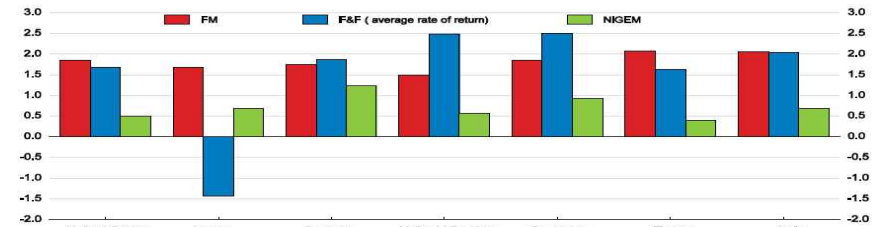
재정지출로 인한 1년후 공공부채 변화(GDP 대비 %)



② 재정지출의 장기 효과

- 공공투자는 자본재 축적 등을 통해 공급측면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평균 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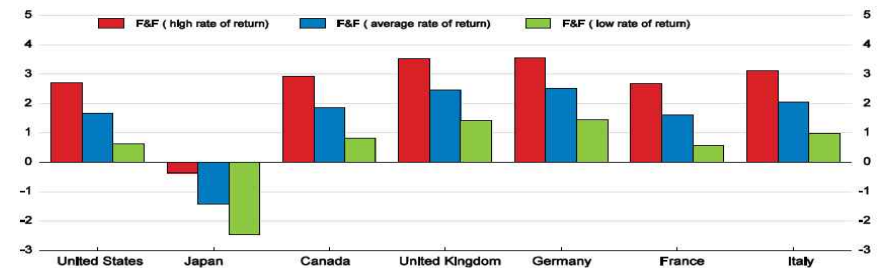
공공투자 영구적 지출확대(GDP의 0.5%)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



* Nigem 모형의 경우 직접세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민간투자 구축, 통화정책 정상화, 물가 상승압력 등을 전제 → 공공지출의 효과가 他 모형대비 적게 추정

-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공공지출의 장기효과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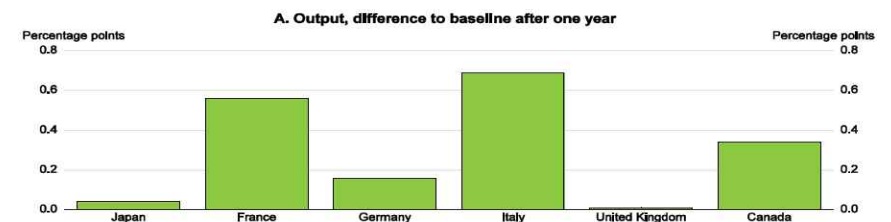
투자 수익률별 공공지출의 장기영향(%)



③ 재정지출 확대와 구조개혁의 병행

- 상품시장 규제개선 등 구조개혁 병행시 재정지출 확대의 단기적 영향이 더욱 증가
- 규제수준이 높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대한 효과 强

구조개혁 병행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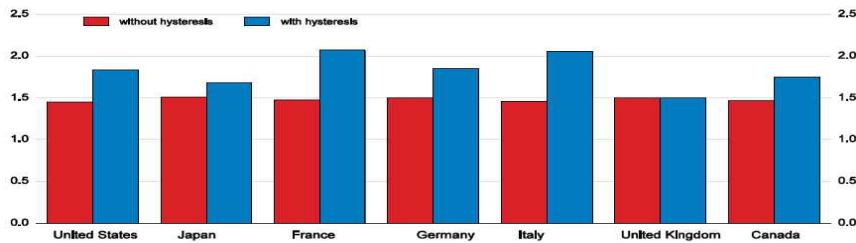


④ 고용시장 활성화(이력현상)

- 인력자본 증대, 생산성 제고효과로 인한 노동수요 증가 → 노동시장이 영구적으로 활성화되며 재정지출의 영향 확대

-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효과가 더욱 증대

이력현상 고려시 재정지출 확대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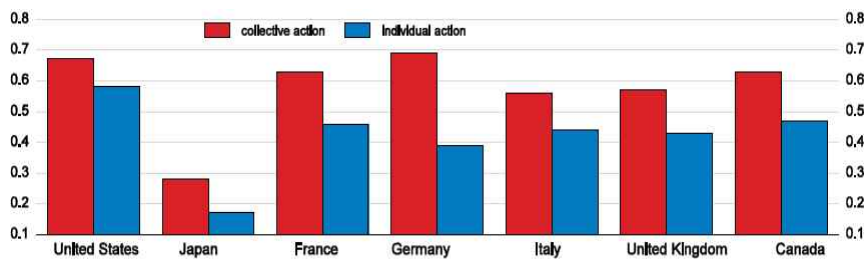


⑤ 집합적(collective)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

-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내수진작에 따른 교역증가, 지식전파 등 파급효과 → 긍정적 영향 확대

- 상호 연계가 강한 유로존의 경우 집합적 행동의 영향이 강

집합적 공공지출 확대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 NiGEM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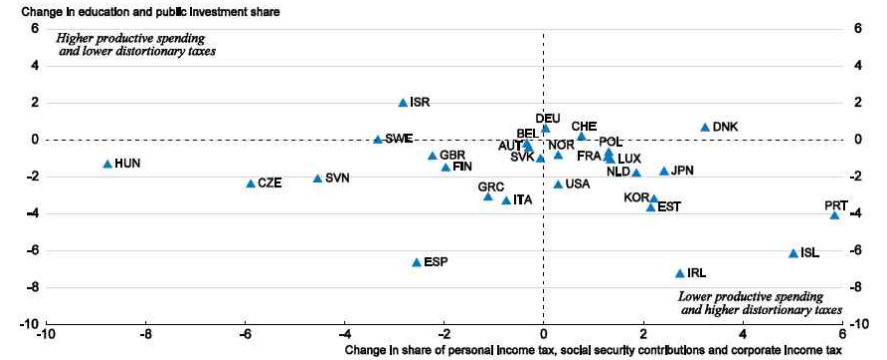


□ 최근 세입세출 구조 변화

-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세입·세출 구조가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 개인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및 법인세 비중이 증가하고, 공공투자 및 교육지출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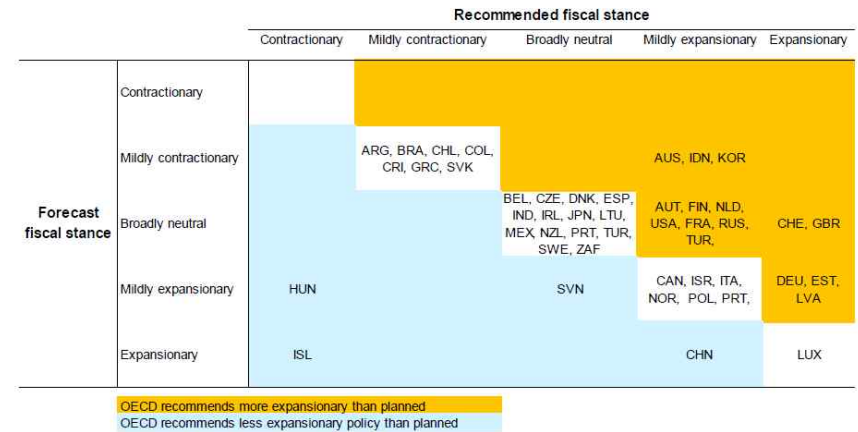
'07년 대비 '13년 국가별 세입세출 비중 변화



□ 재정여력을 활용한 주요 선진국 재정지출 확대

- 한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 대해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

각국의 재정지출 계획 대비 OECD 권고안 비교



< 주요 논의 내용 >

- 전 세계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어가는 가운데, 저금리로 인해 재정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저성장 탈피 노력은 매우 중요**(의장)
 - 특히, 재정지출이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개선 등 구조개혁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캐나다, 헝가리 등)
- 다만, 각국 대표들은 국가별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 여력을 판단해야 하며,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
 - 실제 재정승수가 안전에서의 분석*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 존재(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등)
 - * GDP의 0.5%만큼 재정지출 확대시 0.4~0.7%의 GDP 제고 효과
 - 더불어 재정지출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경우 효과는 더 작게 나타날 수 있으며(핀란드), 따라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캐나다, 미국)
 - 신흥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력보다는 통화정책 여력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칠레)
- 또한, 자본유출 가능성 등 각국의 리스크를 고려한 재정-통화 정책의 균형있는 조합이 중요하다고 언급(브라질)
- 한국 대표단은 재정지출 여력에 대해 고령화 등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분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언급

2. Weakness in world trade

(글로벌 교역의 부진)

< OECD 발표내용 >

① 논의 배경

-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6.5%에서 2012~15년중 3.25%로 둔화
 - 교역집약도*(글로벌 교역량/글로벌 GDP)의 증가세도 금융위기 이후 큰 폭 둔화
 - * 본 보고서에서 GDP 및 교역량을 시장환율 기준으로 측정. 만일 일부 연구결과와 같이 GDP를 PPP환율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GDP가 높게 나타나면서 교역탄성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
 - 무역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important engine)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교역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무역은 규모의 경제, 전문화, 기술혁신 촉진, 지식 전파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
 - * OECD(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0.2%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글로벌 교역 부진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도출

② 글로벌 교역 부진의 원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교역집약도 상승세 둔화는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

① **(경기적 요인)** 경기부진, 교역 유발효과가 높은 투자감소는 글로벌 교역집약도 증가세 둔화에 대해 40% 기여

② **(구조적 요인)** 200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 둔화, 국제분업체계 성숙, 중국의 구조전환 등 구조적 요인도 60% 기여

< 분석방법 >

■ (분석방법) 단순회귀분석

$$\frac{WT}{GDP_t} = -0.005 + 0.422 wtradelib_t + 0.561 GVC_t + 0.006 GAP_t + 0.518 I_t + 2.24 chn_t + \epsilon_t$$

(0.16)*** (0.14)*** (0.002)*** (0.09)*** (0.56)***

단, WT/GDP: 글로벌 교역집약도 증가율, wtradelib: Fraser Institute의 무역규제 지수 변화율, GVC: 내수 대비 수입중간재 비중(경기·가격 요인 제거) 변화율, GAP: 글로벌 GDP갭, I: OECD 국가들의 투자증가율, chn: 중국 교역증가율(무역 비중 가중)

■ (분석결과)

글로벌 교역부진의 원인¹⁾

(%, %p)

	교역집약도 증가율	모형 추정치	상수	경기적요인		구조적요인		
				GDP갭	투자 증가율	GVC	무역자유화 지수	중국교역 증가율
1991~2007(A)	3.7	3.8	-0.5	-0.1	1.5	1.1	0.3	1.4
2011~2015(B)	1.3	1.2	-0.5	-0.7	1.2	-0.1	-0.32	1.7
2015(C)	0.2	-0.7	-0.5	-0.7	1.3	-1.1	0.0	0.2
B-A	-2.4	-2.5	0.0	-0.7	-0.3	-1.2	-0.6	0.2
C-A	-3.5	-4.5	0.0	-0.6	-0.2	-2.1	-0.3	-1.2

○ **(무역자유화 둔화)** EU단일시장 형성, NAFTA 출범, WTO 설립 등 글로벌 무역자유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1990년대와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무역자유화 확대노력(도하라운드 등)이 실패

- OECD의 METRO 모형으로 위기 이후 새로 도입된 무역제한 조치 (2008~14년중 도입된 조치중 40%)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 및 GDP를 각각 0.2%, 0.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 **(국제분업체계의 성숙)** 생산공정의 국제적 분업형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중간재교역이 부진

* 국제분업체계의 수준을 나타내는 구조적 GVC 지수가 1991~2011년중 매년 4%씩 상승한 반면 2011년 이후로는 매년 1.7%씩 감소

- 특히, 전세계 중간재 수입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분업체계가 중국의 자급률 상승, 구조변화 등으로 큰 폭 위축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중국경제의 글로벌 교역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평가하기 쉽지 않지만* 2015년중 글로벌 교역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영향은 국제분업체계, 원자재 교역 등 간접 영향이 상당부분 차지

- OECD의 2015년 글로벌 교역 증가율 전망과 관련하여 중국요인을 제외할 경우 예측오차가 큰 폭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③ 정책과제

□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금융위기 이전처럼 빠르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대 중반까지의 글로벌 교역 급증은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다소 예외적인 현상

-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기 교역탄성치는 1.1~1.5로 전망

○ 다만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에 따라 글로벌 교역은 상당폭 확대 가능

① **(무역자유화 진전)**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sation)가 진전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글로벌 교역집약도가 최대 22% 증가

* 무역규제가 심한 신흥국들을 포함한 다자간 무역개방이 지역 혹은 양자간 무역개방보다 무역확대 및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큼

< 분석방법 >

- (분석방법) 1980~2013년중, 130개국 자료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

$$TI_{it}=1.637-0.126*\log(pop_{it})-0.056*\log(gdp_{it})-0.033*remote_{it}+0.106*wtlib+0.018*tlib+0.011*GAP_{it}+e_{it}$$

(0.003)*** (0.005)*** (0.002)*** (0.009)*** (0.003)*** 0.004***

단, TI: 국가별 교역집약도, pop: 인구수, gdp: 1인당 gdp, remote: 글로벌시장과의 물리적 거리, wtlib: 세계 무역규제지수, tlib: 국가별 무역규제지수, GAP: GDP갭

- (분석결과) OECD의 장기전망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고 무역규제가 최소 수준(홍콩)으로 완화된 경우, 교역집약도는 2060년까지 약 30%* 상승

* 8%는 각국의 경제성장률에 기인하며, 22%는 무역자유화 진전에 기인

- ② (국제분업체계 촉진) 글로벌 가치사슬이 전세계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혹은 양자간 경제협정 등을 통해 국제분업체계를 촉진할 필요

- 한편 국가별로도 규제의 투명성 제고 및 무역 관련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필요

- ③ (서비스 교역 확대) 서비스업의 경제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비중이 낮은 점은 서비스 교역 확대*의 가능성을 방증

* 서비스의 제조업 중간투입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로 인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

- OECD의 연구결과(2016)에 따르면 서비스 규제의 수준 및 국가별 이질성을 완화할 경우 서비스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별 규제 수준을 먼저 낮춘 상황에서 국가별 이질성을 완화할 필요

- ④ (FDI 규제 완화) FD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무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 FDI 확대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을 높이는 한편 기술과 급효과를 통해 생산성 증대에도 기여

- 하지만 무역자유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방에 따른 이득의 분배와 손실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 및 정치적 소통 과정이 필수적

- 최근 들어 정치적 대립은 좌우대립보다는 글로벌화에 대한 찬반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며, 다자간 협상 및 TPP 등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는 모습

< 주요 논의 내용 >

- 최근 교역 둔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의 수입 증가세 둔화 및 글로벌 생산공장으로서의 역할 감소로 판단 (일본)

- 교역증가율 전망의 예측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

- 각국은 최근 브렉시트, 미 대선, CETA 협상 과정 등에서 노정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점에 대해 동의 (일본, 독일, 뉴질랜드, BIAC 등)

- 많은 아시아, 남미 국가들은 글로벌 시장 통합으로 직접투자 및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서비스 부문 교역 증대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독일)

- 소득분배 악화 등 자유무역의 폐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자유무역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 및 대중과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에 공감 (사무국, 독일, 뉴질랜드, TUAC)

- 자유무역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그 이익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손해를 보는 부문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사무국)

- 자유무역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주목해야 함 (TUAC)
 - 특히 독일 대표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한-EU FTA를 언급 (독일)
- 한편, 각국은 글로벌 교역 둔화 요인과 관련, 교역집약도 변화 양상과 그 요인의 국별 차이 등 추가 연구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을 언급
- 계량분석 결과 무역-투자-잠재성장률간 연관관계가 기대보다 강하지 않은 것 같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 필요 (영국)
 - 디지털화 등 기술진보가 글로벌 무역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경향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영국, 독일, 멕시코)
 - 투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교역 신장세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독일)

3-1. Macroeconomic situation: United States

(미국 경제상황)

< OECD 발표내용 >

(경제상황)

-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강세, 국제유가 하락,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soft patch)
 -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 증가,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투자도 과거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은 취업자수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 유희노동력(labor slack)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

(향후 정책여건)

- 통화정책의 경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정책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전망
 - * 연준은 2018년말까지 정책금리를 1.7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지출은 최근 들어 긴축기조에서 벗어나 중립적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향후에도 중립적 기조가 유지될 전망

(경제전망)

- 미국 경제는 달러화 강세, 국제유가 하락, 재고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약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

- 민간소비는 고용증가와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높아질 전망

□ 다만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잠재해 있음

- ① 예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의 긴축속도가 높아질 가능성
- ② 대외수요 약화 및 추가적 달러강세로 인해 수출 및 설비투자가 감소할 가능성
- ③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정책과제)

-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그간 축적된 금융시장의 불균형 완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시건전성 정책(prudential regulation)을 통한 잠재적 위험요인 축소에도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
- 한편 경기 개선 등으로 재정 여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 적극적 노동정책, 보육 정책 등에 투입할 필요
 - 이와 함께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직성 지출(mandatory spending)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유의할 필요

미국 주요 경제지표

	2014	2015	2016 ^{e)}	2017 ^{e)}	2018 ^{e)}
GDP ¹⁾	2.4	2.6	1.5	2.0	1.8
물가	1.6	0.1	1.3	1.9	2.0
실업률 ²⁾	6.2	5.3	4.8	4.6	4.5

주: 1) 2009년 가격, 실질 기준

2) 전체노동력 대비

< 주요 논의 내용 >

□ 미국 측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 정책방향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 데이터와 정보에 의존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 강조 (미국)

□ 미국의 장기간 양적완화가 자산시장 거품 형성 및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중국)

-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의 목표인 2%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양적완화가 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 (미국)

□ 원유가격 하락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에 긍정적인 반면 미국 석유산업의 생산 및 투자 감소 등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일본)

- 미국 경제에서 원유가격 하락의 순효과(net effect)는 긍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본다고 답변(미국)

□ 미국 신행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fiscal stimulus)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의 구성을 단기간내 변경할 수가 없는 점, 재정적자 확대 리스크 등 고려시, 향후 실제 정책 운영에는 불확실성이 상존 (사무국, 이탈리아)

□ 한편, 실제 미국의 재정책대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장기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먼저 반응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가능성 (이탈리아)

- 미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전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 (이탈리아)

○ 이에 대해 미 연준은 정책 결정시 장기 예상 인플레이션 등 장기 시계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설명 (미국)

□ 미국 실행정부의 감세,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경제정책 영향에 대한 아국 등 각국의 질의(아국 등 각국)에 대해, 미측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답변(미국)

○ 세율 인하, 예산안 확정 등에 법적,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정책 변경 및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사무국, 미국)

3-2. Macroeconomic situation: China

(중국 경제상황)

< OECD 발표내용 >

(경제상황)

□ 중국 경제는 제조업의 과잉생산능력 축소 및 민간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고정투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

○ 다만 민간소비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투자도 부진흐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

□ 노동시장의 경우 구인율(job vacancy rate)이 낮아지는 가운데 임금상승률도 빠르게 둔화되는 등 개선세가 약화

○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 9월중 55개월만에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해 하방압력은 여전히 높음

□ 최근 들어 신규대출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공기업의 중심으로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가운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

○ 또한 자본유출이 지속되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환율절하 압력이 증대

(향후 정책여건)

□ 통화정책은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금융불균형 축적 예방을 위해 완화기조가 조정되는 모습

□ 재정정책의 경우 국책은행 자금을 통한 인프라투자 등 매우 확장적인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경제전망)

- 중국경제는 구조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2018년 6.2%까지 둔화될 전망
 - 소비는 소득증가 및 도시화 진전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민간고정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가격 급락, 기업부채 리스크 현실화, 급격한 구조조정 등의 하방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으나 글로벌 경제여건이 개선될 경우 수출 및 성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가능성도 있음

(정책과제)

- 중국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 기업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축적에 유의하는 한편 과잉생산능력 해소, 부실기업 퇴출 등 공급측 개혁에 힘쓸 필요
 - 또한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중국 주요 경제지표

(전년대비, %)

	2014	2015	2016 ^{e)}	2017 ^{e)}	2018 ^{e)}
GDP ¹⁾	7.3	6.9	6.6	6.4	6.2
물가	2.1	1.5	2.1	2.2	2.9

주: 1) 2005년 가격, 실질 기준

< 주요 논의 내용 >

- 중국 대표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경제 심화를 위한 시장중심 경제개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큰 폭의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
 -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적자원의 부동산 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
 - 자본유출이 지속되면서 위안화 절하 압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역내외 환율은 수렴중임
 - 재정측면에서는 지방정부 비용 충당을 위한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혁(상속세, 부동산세)이 추진중
 - 기업부채 감축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이 필요
 - 수출은 대외수요 부진으로, 수입은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모두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측면에서 수출의 부가가치 향상과 수입대체 및 수출구조 전환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
 - 중국의 수출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무역의 이익과 비용의 분배 문제일 수 있음
 - 즉 교역의 손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가운데 교역의 이익은 확산되지 않는 문제에서 기인

□ 각국 대표단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언급

○ 중국경제 리스크가 여전히 크며, IMF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구조개혁이 필요 <영국>

○ 시장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유기업(SOE, state owned enterprise) 투자가 많은 것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신용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국유기업 개혁이 필요 <이탈리아>

— 인프라 공공투자 확대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문제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 필요 <일본, 독일>

— 금년 들어 크게 늘어난 국유기업 투자가 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부문 리스크 축적 우려가 있는 반면 수입수요 증대에 의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한국>

— 공공투자의 대부분은 인프라 투자로서 관개시설 개선 등이 포함됨

민간부문 자본부족을 공공부문이 보완하는 형태로서 주로 국유은행들이 자금을 충당하며, 출자전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을 활용하는 한편 지방정부 채권발행은 억제하고 있음

금년중 공공투자는 20%, 민간투자는 2% 증가하였는데, 자본유출로 투자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일부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SOE 구조조정에 대해 실업이 집중되는 지역이나 산업부문의 노동자 저항 등 반발이 큼 <중국>

○ 은행들의 자산관리상품(wealth management product) 판매가 확대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가 여전히 큼 <일본>

— 자산관리상품은 부외금융수단으로서 풍부한 저축여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은행들이 규제회피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렇지만 은행들의 NPL은 2% 이내로서 상대적으로 건전하며, 경제가 6% 정도로 성장을 지속한다면 큰 문제 없이 관리 가능하다고 봄 <중국>

3-3. Macroeconomic situation: Euro Area

(유로지역 경제상황)

< OECD 발표내용 >

(경제상황)

- 유로지역은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복세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금년중 회복세가 다소 약화
 - 고용사정 개선이 더딘 가운데 근원인플레이션율도 낮은 수준
 - 한편 회원국별 성장세의 차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심국 중에서는 독일이, 주변국 중에서는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

(향후 정책여건)

- 통화정책의 경우 정책금리가 동결되고 2017.3월 이후에도 양적 완화정책이 지속되는 등 초완화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정책의 경우 2017~18년중 소폭이나마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전망

(경제전망)

- 불충분한 경기부양책, 구조적 제약요인 등으로 내수 증가세가 부진한 가운데 2017~18년중 유로지역은 1.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높은 수준의 유희노동력(labor slack)이 존재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EU탈퇴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확대, 취약국의 금융부실 및 정치적 리스크, ECB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정책과제)

- ECB는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통화정책만으로 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재정 여력이 충분한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재정정책 확장 및 성장률 제고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부 정책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포용적 성장을 위해 교육, 보육 등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성장 제고를 위한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협약을 완화할 필요
- 이와 함께 서비스와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단일시장 형성 등 상품 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한편, 유럽 단위의 단일정리기금(Single Resolution Fund) 마련 등 은행통합 추진으로 금융위기 시 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

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

(전년대비, %)

	2014	2015	2016 ^{e)}	2017 ^{e)}	2018 ^{e)}
GDP ¹⁾	1.0	1.6	1.6	1.5	1.6
물가 ²⁾	0.4	0.0	0.2	1.1	1.4
실업률 ³⁾	11.6	10.9	10.1	9.6	9.2

주: 1) 2011년 가격, 실질 기준

2) HICP(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기준

3) 전체노동력 대비

< 주요 논의 내용 >

- 유로지역 대표단은 GDP 성장,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들이 대체로 전망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은 완화적이고 재정정책은 중립적이라고 언급
 - 경제성장의 구성에 있어서는 유희생산능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가 미약

- 경상수지는 전체적으로는 흑자이지만 프랑스 등은 적자를 보이는 등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음
 - 은행부문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으며, NPL 부담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해소중
 - ECB는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자본 유지 등을 통해 금융부문 복원력 점검과 유지에 노력중이며, 저금리 여건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기관 영업모델 구축을 지원
 - ECB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렴, 원활한 금융여건 유지 등을 위해 저금리와 자산매입을 지속하는 등 완화기조를 유지해갈 것
 - 유로지역은 투자증대, 공공재정 건강성 유지, 구조개혁, EMU 체제 완비 등이 필요
- 각국 대표단은 브렉시트의 영향, 기업투자 부진, 구조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코멘트
- 영국경제는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불안정 이슈도 제기되지만 완화될 것으로 예상 <영국>
 - 그렇지만 기업들의 이탈 조짐은 없으며 기업투자 급감 우려는 약화
 - 경기둔화, 투자약화, 인플레이션 둔화 등의 리스크가 있지만 EU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이민규제, EU시장 접근 등에서 정치적 긴장이 있을 수 있음

- 지난 8월 영란은행의 통화완화 패키지는, 스텔링 약화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위축으로 인한 실업증가와 유흥생산능력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
 - 폴란드 대표단은 영국에 경기 진작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데 11월에 긴축 신호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영국 대표단은 파운드화 절하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 움직임이 추가 완화의 필요성을 낮추었다고 답변 <폴란드, 영국>
 - 유로지역 금융부문 부실채권 문제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지역 은행동맹(banking union) 강화 등 은행문제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음 <네덜란드, 독일>
- 유로지역 대표단은 결론에서 유로지역 성장에 국가간 차이(핀란드, 이탈리아 1% 이하, 슬로바키아 3%, 기타 1~2% 등) 있는 가운데, 금리는 대체로 수렴중이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
-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임금상승이 억제되면서 노동시장 개선의 소비 회복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
 -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리바운드 조짐 있으며, 건설투자보다는 여타 투자에서 개선 신호가 있음
 - 최근 유로지역 경제상황은 대체로 1.6% 성장 전망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3-4. Regional rounds(Japan)

(경제전망: 일본의 전망과 정책 이슈)

< OECD 발표내용 >

- ☐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16년은 0.6%, 2017-18년 동안은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노동력 부족과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업이익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2016년의 세 번의 추경예산에 더불어, 엔화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재정 건전화 과정을 2016-17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
- ☐ 일본은행은 2% 인플레이션 목표가 달성 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함.
- ☐ 구조개혁은 생산성 향상과 여성을 포함한 고용 증가를 위해 필수적임.
 - 이는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높은 상대 빈곤율을 감소시킬 것
- ☐ 2018년까지 GDP의 240% 수준에 육박하는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성장이 필수적임.
- ☐ 일본의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통합계획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 성장 모멘텀은 2018년 까지 계속될 전망

< 주요 논의 내용 >

- ☐ 일본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이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 대표는 일본 경제가 직면한 소비, 노동, 인플레이션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함
 - 소비는 여전히 미래의 불확실한 요인으로 인해 아직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노동시장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구인구직비율은 상승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개선추세는 지속**
 - 유가가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점차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
- ☐ 또한 일본 정부의 개혁성과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판단
- ☐ 일본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는 OECD 회원국에 비해 평균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노동시간 축소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
- ☐ 아울러, 일본 대표는 일본 수출 부진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원인은 중국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간재 무역 비중의 축소 및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함
- ☐ 일본 중앙은행은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
 -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장기 수익률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3-5. Regional rounds(Emerging Market Economies)

(경제전망: 신흥국의 전망과 정책 이슈)

< OECD 발표 내용 >

(브라질)

- ☐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긍정적인 신호는 존재
 - 긍정적인 요소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소비자 및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실업률은 2017년 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은 목표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돌아올 것
- ☐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재정이 개선된다면 통화정책은 추가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됨
- ☐ 공공지출은 몇 년동안 GDP 보다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공공부채역시 증가해 왔음.
 - 중기적으로 공공지출은 새로운 회계기준을 포함할 계획이며 새로운 회계기준은 기 계획된 연금과 사회보장에 대한 개혁을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인도)

- ☐ 인도는 2017-18년 동아 연간 7.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공공임금 및 연금 인상, 높은 농업생산, 농촌지역의 평소 강수량으로의 복귀 등에 기인하여 민간소비는 양호할 것으로 보임.

- 민간투자는 과잉설비의 감소, 기반시설의 노후화, 기업들의 디레버리징 등에 기인하여 점진적으로 되살아 날 것으로 예상됨

- ☐ 확장적 거시정책을 위한 여력이 존재하나 구조개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임.
- ☐ 높은 공공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좀 더 성장친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

< 주요 논의 내용 >

- ☐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주요 자원수출 중심 국가의 경제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을 비롯한 실물지표의 부진이 심화되고 정부 수입도 줄어들면서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
- 다만,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대다수 자원수출 신흥 국가들의 기업부채는 여타 신흥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외환건전성 관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 ☐ 주요 원자재 수출 국가의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될 전망으로 보임
- 그러나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경제지표의 개선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기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내부 문제도 다수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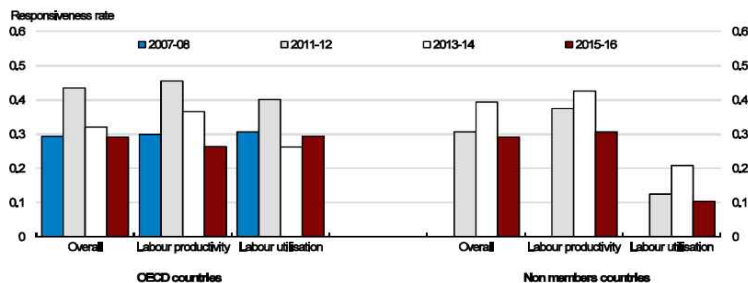
4. Going for Growth and Resilience/Inclusive Growth & Well Being (Going for Growth, 탄력적/포용적 성장 및 삶의 질)

<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

1 Taking Stock of Reform Action and Challenges in 2017 (지난 구조개혁 성과 평가 및 2017년 새로운 과제)

- 지난 2년간 구조개혁 속도가 둔화되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귀
 - 회원국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구조개혁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속도가 유지되던 OECD 이외 국가에서도 나타남
 - 노동생산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혁신 분야에서 속도 둔화가 두드러진 모습
- 긍정적인 점은 「Going for Growth」에서 권고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장벽 완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 등의 개혁은 증가했다는 것
- 대부분의 정부는 구조개혁을 특정분야에만 집중하여, 정책간 시너지, 개혁간 상호보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엔 소홀
 -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분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보완되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필요

Figure 1. The pace of reforms has decreased further driven by a slowdown in productivity-enhancing reforms
Responsiveness to Going for Growth recommendations across the OECD and non-member countries¹



- 새로운 정책권고는 더 강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것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성장의 이득이 더 넓게 분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루고 있음
- 생산성 향상, 고용 증가와 포용성(Inclusiveness) 사이엔 강한 시너지효과가 발현될 수 있음
- 혁신 기업의 진입과 성장 촉진, 높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여성,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인프라 투자 및 직업훈련 향상 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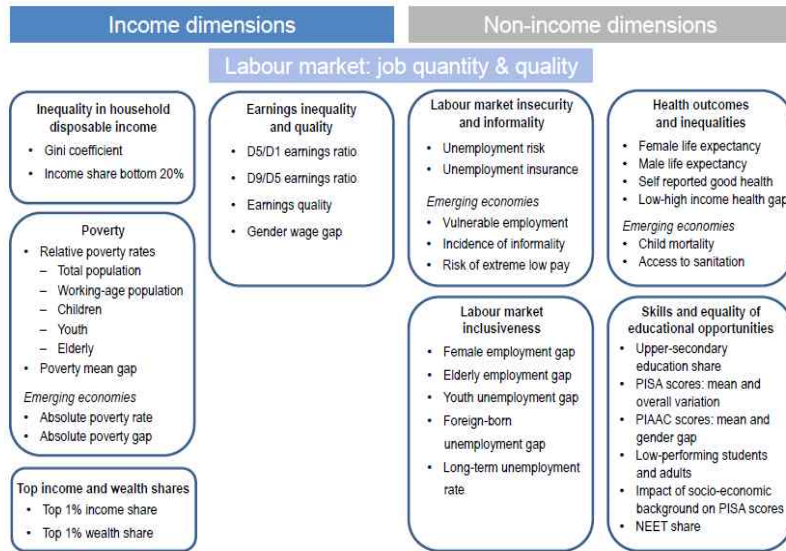
※ 포용적 성장을 위한 10가지 정책 권고

- ① 교육 기회를 더욱 공정하게 확대 ② 직업 교육 및 훈련의 확대 및 개선
- ③ 기업 진입 허가 절차 간소화 및 Red Tape철폐
- ④ 전문서비스 영역 진입장벽 완화 ⑤ 교통, 에너지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 ⑥ 대학과 기업의 R&D 협업 강화 ⑦ 세원 확대 및 조세지출 축소
- ⑧ 성평등 제고 ⑨저숙련노동자 고용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 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활성화

2 Integrating Inclusiveness into Going for Growth (Going for Growth와 포용성을 통합)

- Going for Growth에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 생산성·고용 등과 함께 포용성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 하였으며 특히, 포용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권고
- 국가별로 포용성 측면에서 성과(performance) 및 정책(policy)이 부족했던 영역을 검토하여 권고
- 국가의 포용성 평가는 소득측면과 비소득측면에서 불평등, 빈곤, 직업의 질, 성별 격차 등을 고려

Figure 1. The Going for Growth dashboard of inclusiveness indicators



□ 포용적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권고

① 양질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성 보장

- 교육은 개인에게 좀 더 양질의 삶(decent living)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따라서 청년들에게 취학전부터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지원을 해 줄 필요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하고, 직장 수요에 맞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② 노동시장 불안정성(insecurity)과 분절(segmentation)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을 향상

- 열악한 위치에 있는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 시켜야 하며, 특히 NEET 상태의 청년들을 끌어들이 필요
- 신흥국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분절화를 해소하여 더 많고 훌륭한 일자리를 창출해야함

③ 소득 불평등 및 빈곤 완화를 위해 조세 및 이전체계의 효율성을 강화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분배 측면에서 역효과 없이 조세 및 이전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소득분포상 하위에 위치한 사람 및 여성에 대한 지원은 강화 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우대조치는 제한

□ 국가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소득 불평등은 GDP규모와 큰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영미권에서는 GDP가 크고,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반면, 북유럽의 경우 GDP가 크에도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남
- ② 한국과 일본의 경우 지니계수는 중간수준이나, 하위 20%의 소득 비중으로 보면 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③ 00년대 중반 이후 지니계수로 평가한 OECD회원국의 소득 불평등도 변화는 대체로 안정적이며, 신흥국의 경우는 불평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④ 0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취약가구가 소득상 어려움(Income Hardship)을 겪게되는 경우가 증가

③ Reform Agenda For 2017 : Overview and Country Notes [한국 구조개혁 평가]

□ 한국 총평

- (성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성은 여전히 OECD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불평등) 지니계수는 OECD 평균을 하회하였으나, 하위20% 가처분소득 비중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불평등, 조세와 복지체계의 약한 재분배 효과 등으로 OECD 평균을 하회
- (성과) 2015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규제개혁, 육아서비스 이용가능성·질 제고를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 FTA 체결 확대 등
- (권고)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규제개혁 및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등

□ 2017년 정책 권고

① 규제 개혁

- (성과) 규제 기요틴 등을 통해 15년말까지 기업이 제기한 약 600개 규제 문제 해소, 규제 일몰제 적용범위도 32→50%로 확대
- (권고) 정확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규제총량제 사용, 규제 품질 제고, 행정지도 역할 축소,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②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

- (성과)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맞춤형 보육 시행, 공공 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지원,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 (권고) 인증제도, 경쟁강화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

③ 노동시장 개혁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 (성과) 노사정대타협, 노동시장 개혁법안 제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대상에 포함 등
- (권고)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 최저임금 인상, 사회 보장범위 확대, 비정규직 훈련 강화 등

④ 조세시스템 효율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성과) 맞춤형 복지시스템 도입, 자영업자에 대한 EITC 지원 등
- (권고) 부가세, 환경세 등 간접세와 재산세율 인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및 국민연금 적용 범위를 확대

⑤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 (성과) 쌀 시장 개방 및 관세화(관세율 513%) 시행, 중국, 터키, 베트남과 FTA를 통해 농산물 수입제한 완화
- (권고)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농업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 주요 논의 내용 >

- 회원국들은 구조개혁 논의과정(Going for Growth)에서 성장(Growth)과 포용성(Inclusiveness)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
- 다만, 각국 대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각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OECD 정책 제언들의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독일), 최근 EU는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개혁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EU)
 - 포용성과 성장의 동시 충족은 쉽지 않으며, 새로운 종류의 성장정책 및 구조개혁이 필요(스위스)
 -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나, 노동개혁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스페인)
 - 남아공의 경우 청년들에 대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으로 상품시장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언급
- OECD는 포용성 강화는 이미 각국 정상간 합의된 내용임을 강조하며,
 - 비록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가별 고려도 필요하나, OECD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별모델의 개발 및 정책 제언이 중요함을 언급

5. Productivity and firm exit

(생산성과 기업퇴출)

<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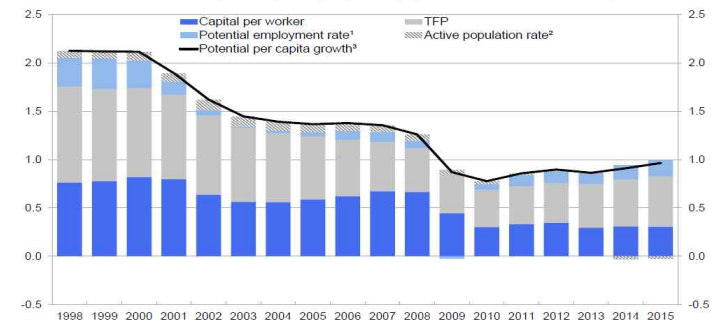
1

The Global Productivity Slowdown, Technology Divergence and Public Policy: A Firm Level Perspective

- (논의 배경) 199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OECD 회원국의 잠재성장률이 1.0%p 이상 감소

Figure 1. Weak labour productivity underpinned the decline in potential output in OECD countries

Contribution to potential per capita growth (% points unless otherwise noted)



Notes: Assuming potential output (Y^*) can be represented by a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n terms of potential employment (N^*), the capital stock (K) and labour-augmenting technical progress (E) then $y^* = a * (n^* * e^*) + (1 - a) * k$, where lower case letters denote logs and a is the wage share. If $\bar{P}$ is the total population and pwa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here taken to be aged 15-74), then the growth rate of potential GDP per capita (where growth rates are denoted by the first difference, $d(\cdot)$, of logged variables) can be decomposed into the four components depicted in the figure: $d(y^* - p) = a * d(e^*) + (1 - a) * d(k - n^*) + d(n^* - pwa) + d(pwa - p)$.

1. Potential employment rate refers to potential employment as a share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aged 15-74).

2. Active population rate refers to the share of the population of working age in the total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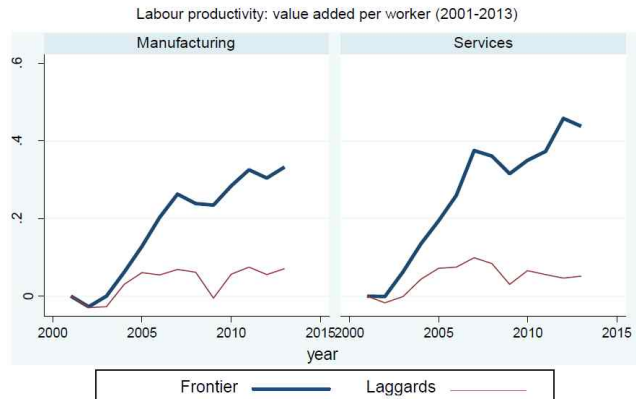
3. Percentage changes.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99 database.

- (연구 방식) 기업 단위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생산성 감속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함.
- (연구 결과) 글로벌 생산성 감속 현상은 글로벌 기술선도기업(frontier firms)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기술정체기업(laggard firms)의 노동생산성은 정체 내지 하락하면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된 결과로 판단됨.

Figure 2. A widening labour productivity gap between global frontier firms and other firms



Notes: the global frontier is measured by the average of log labour productivity for the top 5% of companies with the highest productivity levels within each 2-digit industry. Laggards capture the average log productivity of all the other firms. Unweighted averages across 2-digit industries are shown for manufacturing and services, normalized to 0 in the starting year. The time period is 2001-2013. The vertical axes represent log-differences from the starting year: for instance, the frontier in manufacturing has a value of about 0.3 in the final year, which corresponds to approximately 30% higher in productivity in 2013 compared to 2001. Services refer to non-financial business sector services. See details in Section 3.3.

Source: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the recent update of the OECD-Orbis productivity database (Gal, 2013).

- * 글로벌 기술선도기업(frontier firms)은 모집단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기업 중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뜻함. 반대로 기술정체기업(laggard firms)은 모집단에 포함된 모든 국가의 기업 중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의 뜻함.

□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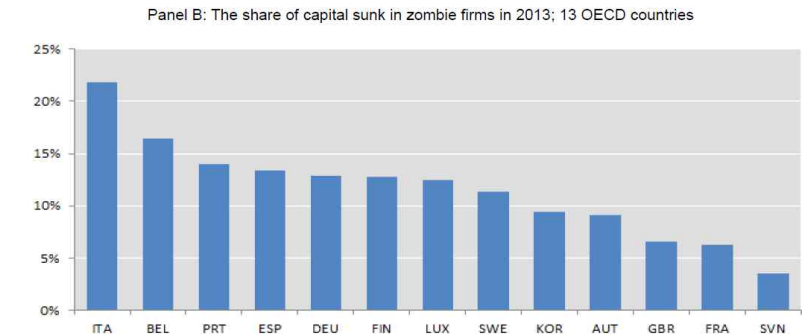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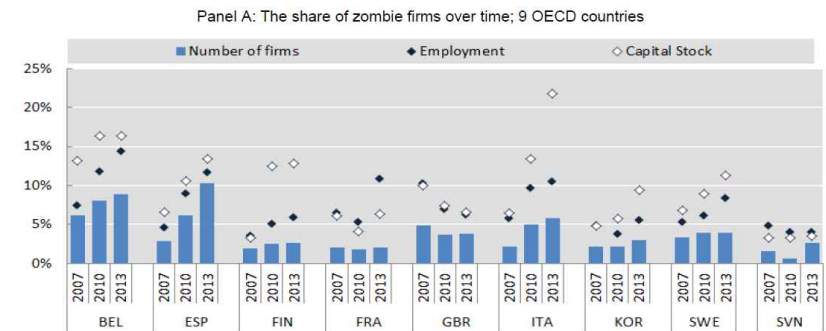
- 승자 독식 현상: 기술선도기업은 디지털 기술과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됨.
- 기술 확산의 정체: 기술 장벽이 높아지면서 기술정체기업이 기술 선도기업을 추격하는 속도가 하락하고, 그 결과 기술 확산이 정체됨.

□ 경쟁 친화적인 규제개혁이 더딘 산업일수록 선도기업과 정체 기업 간 기술격차가 커짐을 확인함.

2 Exit Policies and Productivity Growth: Policy Issues and Trade-offs

- (논의 배경)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좀비기업의 증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좀비기업의 증가가 구조적 정책의 약화 때문인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부작용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Figure 5. The rise of zombie fi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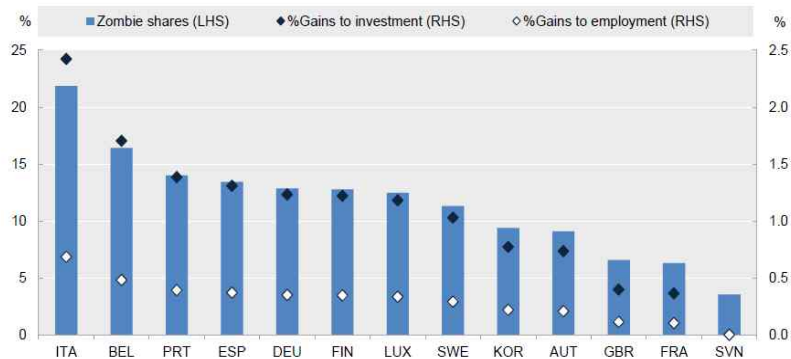
Note: Firms aged ≥ 10 years and with an interest coverage ratio < 1 over three consecutive years. Capital stock and employment refer to the share of capital and labour sunk in zombie firms.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on ORBIS.

- * 좀비기업: 10년 이상 업력과 3년 이상 이자비용 감당불가 기업으로 정의

- (연구 방식) 기업 단위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좀비기업의 증가를 실증하고, 기업 퇴출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연구.
- (연구 결과 1.)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좀비기업의 증가는 정상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 전체의 다요소생산성(MFP) 성장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좀비기업에 투입된 자본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고용 및 투자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좀비기업은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 및 진입 후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비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이 없었더라면, 여타 정상 기업들의 투자는 2013년 기준 평균적으로 2%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투자 증가 효과는 이탈리아에서 특히 크게 나타남.

Figure 8. Counterfactual gains from reducing the zombie capital share to best practic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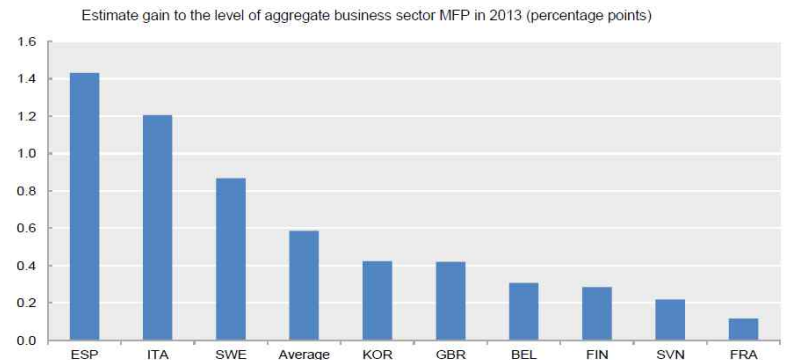


Note: This figure shows the counterfactual gains to investment and employment of a typical non-zombie firm from reducing the share of zombies to the best practice in Slovenia in 2013. Zombie shares refers to the share of capital sunk in zombie firms, defined as firms aged ≥ 10 years and with an interest coverage ratio < 1 over three consecutive years.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on ORBIS.

- 좀비기업의 자본스톡 증가는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초래하여 MFP를 감소시켰을 가능성
 - 좀비기업에 의한 시장잠식 수준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2013기준 MFP는 이탈리아의 경우 0.75%, 스페인의 경우 1%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여타 국가들에서도 좀비기업에 의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경우 약 0.5% 정도의 MFP 증가가 기대됨.

Figure 11. Counterfactual MFP gains from reducing zombie shares to industry best practice level



Note: This figure shows the counterfactual gains to MFP via higher capital reallocation from reducing the shares of zombies in each country to the best practice level in each industry and year. The country level numbers are an unweighted average of all industries (2-digit level detail according to NACE Rev. 2, covering the nonfarm non-financial business sector).

Source: OECD calculations based on ORBIS.

- (연구 결과 2.)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특히 실업을 최소화 하는 데 있음.
- 기업퇴출에 의해 발생한 실직자들이 1년 내에 재취업 할 확률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s)에 대한 지출규모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반면 수동적 정책(passive measure) 관련 지출 증가는 낮은 한계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됨.

- 실업문제에 대해 수동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지출 구성의 형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 ALMPs에 대한 질적 통제가 중요함.
- 다만, 소비 평탄화나 일자리매칭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동적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 비자발적 실업자들의 경우와 비교할 경우, 기업퇴출에 의한 실직자들의 재취업 확률은 ALMPs와 같은 정부 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
- 상품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공공 부문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은 ALMPs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됨.
- 임금에 대한 조세 격차(wedge) 축소도 재취업률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지역 간 이동가능성 역시 재취업률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함.

< 주요 논의 내용 >

- 스페인 대표단은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 글로벌화나 디지털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영향은 개별국마다 상이한 특징이 존재함을 강조하며 결과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임
- 또한, 기술선도기업과 후진 기업의 생산성 차이는 구조적 변화의 원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 변동적 요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

- 뉴질랜드 및 유럽 대표단은 개별 산업의 기업들은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기업 규모를 통제하여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
- 한국 대표단은 실증 분석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이미 퇴출되어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생산성 차이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
- 아울러, 좀비 기업의 증가에 대해 정책 실패의 결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자 상환 시기 연장 또는 이자 비용 지원과 같은 정부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주요 질의에 대해 개별 국가와 각 산업에 따른 분석의 강건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구조 개혁과 노동시장의 비용을 최소화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함을 언급함